

제322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9 호

국회사무처

2014년2월27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정기) 인사청문경과보고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최윤희) 인사청문경과보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상환) 선출안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김용호) 선출안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
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재홍) 추천안
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삼석) 추천안
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
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10.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11.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
12.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
13.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부의된 안건

- | | |
|--|---|
|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의장 제의) | 2 |
| 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재홍) 추천안(의장 제의) | 2 |
| 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삼석) 추천안(의장 제의) | 2 |
| 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 |
| 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3 |
| 10.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4 |
| 11.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4 |
| 12.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 |
| 13.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 |
| o 5분자유발언 | 6 |

(16시24분 개의) 다.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간사에 황영철 의원, 이찬열 의원,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명숙 의원, 간사에 박상은 의원, 김기준 의원,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한구 의원, 간사에 전하진 의원,

홍중학 의원,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곤 의원, 간사에 김종훈 의원, 박민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26일 의장 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 등 3건의 추천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덕수 의원 대표발의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 등 3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현숙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원 조성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제안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 운영시스템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감사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는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의장 제의)

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재홍) 추천안(의장 제의)

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삼석) 추천안(의장 제의)

(16시27분)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 의사일정 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재홍) 추천안, 의사일정 제7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삼석) 추천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의 임기가 올해 3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의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경림 의원, 신동우 의원, 김성주 의원, 이원욱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뒤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31분 투표개시)

○의장 강창희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16시5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에 대하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0표 중 가 198표, 부 35표, 기권 7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재홍)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0표 중 가 166표, 부 66표, 기권 8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재홍)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삼석) 추천안에 대하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0표 중 가 217표, 부 11표, 기권 12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삼석)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시58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8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 및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공원 조성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전쟁범죄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방 69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기림비 설치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려서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며,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의 조성 및 공원 내 기림비 설치를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셋째,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외교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념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의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노력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1.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산업통상자원 위원장 제출)

(17시04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9항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정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전정희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3건의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정부가 2013년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당시에 민간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 심사위원이 개별 사업자에게 부여한 평가점수가 소수점까지 동일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발전소의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감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발전소 운영 경험이 거의 없는 사업자가 경험이 많은 사업자보다 운영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한 평가기준과 개별 사업자에 대한 배점 부여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정한 기준하에 투명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운영 실태와 K-EMS, 차세대 EMS, 차세대 MOS의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

는 내용입니다.

전력계통 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계통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연료비의 과다지출과 송전선 상태에 대한 감시 실패로 인한 연쇄적 정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EMS를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개발이 추진된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개발과정,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과정 및 실험결과의 보고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며 그 결과물조차도 외국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실시간 계통운영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K-EMS, 차세대 EMS, 차세대 MOS의 개발과정에서 실험결과의 허위보고나 외국 프로그램의 복제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계통운영 여건의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전력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지난 2011년 한국동서발전이 자메이카전력공사의 지분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결정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업 인수 당시 자메이카전력공사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자메이카의 경제상황이 불안한 점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회의와 평가절차만을 거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해외사업은 2011년과 2012년에 배당을 통해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나 현재 자메이카 정부로부터 추가 투자 요구를 받는 등 향후 수익개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인수 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향후 한국동서발전의 해외사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

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동서발전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5인으로서 한국동서발전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시13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완영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 소속 경북 칠곡·성주·고령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환경부는 지자체에 약 3000억 원 정도의 국고지원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법 및 기술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전문적인 검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이 완공 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곧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실효성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127조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 전반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함으로써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건)(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 위원장 제출)

(17시16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강창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리고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참담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국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7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약속한 기초연금을

민주당의 반대로 7월부터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어르신들을 볼 낫이 없고 침통한 마음뿐입니다.

아시다시피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려면 6월 초에는 신청·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하위법령 제정, 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등 사전준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월에 통과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의미 없는 시간 끌기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다시 기초연금에 대해 TV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선 공약 이후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쳐 작년 9월에 기초연금안이 발의되었고 10월의 국정감사, 11월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12월 예산과 법안심사를 통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월에는 2월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소득 하위 75% 대상의 어르신들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확대 등의 협상안을 만들어 민주당에게 제시하였으나 민주당은 70% 이하 노인들에게 20만 원 일괄지급안만을 제시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제대로 된 협상안조차 사실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합의를 위해 모인 협의체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마저 하지 않았으며 제도시행을 늦추고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전혀 양보가 없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기초연금에 대해 TV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주장처럼 기초연금을 일단 지급한 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한다면 금년 7월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생활이 어려워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탈락해야 할 타워팰리스 사는 강남 노인은 20만 원을 받는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200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던 당시 전체 국정 운영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정부에서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는 안을 추진함에 따라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는 않았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당시 여야가 합의해 제정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의2에 국가적 재정을 고려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합의문 5항의 병급규정 삭제조항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최종안에는 5항의 병급규정 삭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당장에 쫓겨 미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괄지급안은 재정적 현실성이 없고 자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방안입니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 70% 이하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차등지급안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당장은 예산상에 큰 차이가 없지만 후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법은 국가 재정은 물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 받기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께서 발언 도중에는 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 신기남 의원입니다.

국회를 상징하는 문양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회는 개원 첫 해인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모든 공용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했고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을 제정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계승하는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였으며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국회가 정작 자신을 상징하는 문양은 정체불명의 한자로 써왔다는 사실은 정체성에 어울리지도 않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쳐야 할 문양의 종류는 지금도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회의장의 저 정면을 압박하고 있는 괴한 국회 문장을 비롯해서 국회 기, 국회의원 배지, 국회차량 표지판 등입니다.

국회 문양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50년 2대국회 때 한자로 처음 만들어졌고, 1960년 5대국회 때 참의원의 것을 한글로 바꾸어서 1년쯤 쓰다가 1963년 6대국회에서부터 다시 한자로 썼고, 1971년 8대국회 때 한글로 바꿔 1년을 쓰다가 1973년 9대국회 때부터 다시 한자로 환원된 다음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제 혼란을 끝내고 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보면 정부와 법원은 모두 한글로 '정부' '법원' 이렇게 한글로 된 문양을 씁니다. 정부와 법원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는 아직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만이 한자로 된 헌법 헌자 헌(憲)을 아직 쓰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 문양을 한글로 바꾸자는 내용의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7대국회인 2004년 6월 14일 박병석 의원 등 35인이 한글 '국'으로 하자는 내용, 그해 7월 8일 박영선 의원 등 74인이 한글 '국회'로 하자는 내용의 각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19대국회에 들어와서 2012년 8월 3일 노회찬 의원 등 64인이 한글 '국회'로 하자는 내용, 2013년 2월 15일 박병석 의원 등 12인이 한글 '국'으로 하자는 내용의 각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금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전향적

인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19대국회가 개원한 후 어언간 2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즈음에 여전히 논의만 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과거의 예와 마찬가지로 종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말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국회의원들만 자체적으로 뜻을 모은다면 언제라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좌고우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압도적 여론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 각 당의 대표자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는 속히 합당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이끄는 지도자인 국회의장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봐서 의장님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해묵은 과제가 국민의 희망대로 이루어져서 새시대에 맞는 국회의 상징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몇 분과 더불어서 배지가 한글로 바뀌지 않는 한 달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새로운 국회의원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고 싶습니다. 바로 내일이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많은 논란 끝에 어렵사리 출범했던 국정원개혁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 시점을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개혁특위가 출범할 당시 정세균 위원장께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금지시키는 것과 우리의 안보 현실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이나 국외 정보력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가 위원회 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문병호 민주당 간사님 또한 지난 12월 31일 제8차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대표 합의문에 12월 말까지는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정보기관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점을 두겠다고 추진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국정원의 활동에 몇 개의 족쇄만 채워 놓고 기능 강화는 비켜 나가는 먹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둔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수층과 여권 내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 부처 상시 출입 제한, 정치 관여 처벌 강화,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 등 민주당의 주장이 모두 수용된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등 7개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국정원개혁특위는 2개월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 이외에는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없이 허송세월만 하다 활동시한을 마쳤습니다. 우려했던 먹튀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단계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정원의 최소한의 기능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활동 기본법 등의 법 제안은 거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오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대선 개입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전·선동에만 주력했습니다. 최근 국회의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은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선양지역 대공수사국 요원의 실명까지 만천하에 공개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국익을 훼손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번의 국정원개혁특위를 두고 ‘빈수레 특위’ ‘맹탕 특위’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었던 국정원 개혁특위의 운용 행태에 참담한 심정일 따름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민주당이 안보를 정치에 악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다시는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점,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 국정원의 기능 강화 문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정원 기능 강

화 법안들이 정치적 이해를 벗어나 국익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정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 증거로 제출한 3건의 문서, 출입경기록·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삼합변방검사참이 발급했다는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의 외교부 검찰 국정원을 중국 공문서 위조범으로 국제사회에 고발한 것입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기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25일 심양 총영사관을 방문, 조백상 총영사, 이모 영사, 유 모 영사, 확인 담당 영사 등을 함께 면담하여 이 공문서 위조사건의 사건 경위와 수사의 핵심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 주한 중국대사관의 서류들이 가짜라는 발표를 보고 심양 총영사관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은 처음 듣는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했다는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심양 총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1월경 그 문서가 영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되고 그 사본도 당연히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인의 신분도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조백상 총영사는 그 문서에 유 모 영사, 인증 담당 영사가 서명한 것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는 길림성公安청에 화룡시公安국에서 받은 팩스 문건에 찍힌 팩스 번호가 정말 화룡시公安국의 팩스 번호인지를 문의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아주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했다는 정황 설명에 대한 가짜 답변서를 가지고 와 영사 인증을 신청

한 인물을 밝히면 됩니다. 담당 영사에게 이번의 그 문건을 보면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겠느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유 모 담당 영사는 재외공관 공증법 5조를 들며 ‘신청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백상 총영사가 그 문서에 ‘이 담당 영사의 서명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했는데 그러면 서명한 것은 맞느냐’라고 묻자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증법과도 관계가 없고, 더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직속상관인 총영사가 거기에 담당 영사의 서명이 있다고 답변하는데도 왜 확인해 줄 수 없느냐고 되물었지만 여전히 난처한 표정 속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담당 영사의 서명 그 자체마저도 어찌면 위조되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국정조사나 특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아주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했다는 정황 설명에 대한 가짜 답변서를 가지고 와 영사 인증을 신청한 인물이 누구인지 — 거기 밝혀져 있습니다 — 이것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쉽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지만 이는 국정검사 또는 특검으로만 가능합니다.

검찰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세 문건들을 구했다고 했다가 점차 진상이 밝혀지자 슬그머니 2건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선량한 한 사람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에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동원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 위조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우리의 외교부 검찰 국정원을 중국 공문서 위조범으로 국제사회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국가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사건입니다. 빠르고 신속하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1주년 기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바로잡아 부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며,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넓은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문제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 경영의 주원인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7만 1000명의 직원이 5년간 쓴 복리후생비 3000억 원이 방만 경영의 주원인이라면 낙하산 사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인한 손실 2조 4000억 원은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철도공사의 용산 개발 사업 실패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이 빚더미에 앉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 낙하산 인사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져 결국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수자원공사, 자원외교라는 대통령의 말에 앞다투어 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2조 원의 손실을 본 에너지 공기업들, 그리고 현대건설의 인맥들이 경영을 망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만든 LH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방만 경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입니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 담화문에는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옹호하고 더 많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데 이 정부는 정신이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취임한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이 낙하산 인사 그리고 회전문 인사입니다. 내부 인사가 기관장이 된 경우는 121명 중 18명에

불과합니다. 대선 캠프 출신, 지지자, 전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와 상임이사 자리에도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낙하산 인사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임원이 올 수 있도록 임원 자격 심사소위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만들고, 관련법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던 날이 20일입니다. 하지만 19일, 20일, 그리고 21일에도 캠프 출신이거나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취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보고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낙하산을 내려보낸 상황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자격을 만들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해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낙하산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뒷북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이제 배가 찬 모양'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법까지 개정해 자격요건을 만들겠다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면 군인이거나 경찰 출신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의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낙하산 인사에 대한 또 다른 면죄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이거나 면죄부에 불과한 낙하산 방지책을 생색내듯이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퇴하든 정부가 임명을 철회하든 기존의 낙하산 인사부터 정리하는 성의를 보여야 국민들 앞에 공공기관 정상화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선한 새누리당 의원, 캠프 출신, 지지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감사로, 상임이사로 안착해서 연봉 1억 이상씩을 받으며 이사회에서 거수기로 활약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을 망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며 노동자들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혁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그리고 노동자까지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윤	강기정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중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중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한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길정우	김경협
김광립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한구	이해찬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의락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3인)

심학봉 이강후 한기호

기권 의원(12인)

강기윤 강석훈 민병주 여상규
 유재중 이철우 이현재 정수성

조명철 최경환 홍영표 홍일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한구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재 성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이 철 우 한 기 호

기권 의원(12인)

강 석 훈 김 상 훈 민 병 주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이 강 후 이 현 승
 이 현 재 최 경 환 홍 일 표 홍 지 만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한 구 이 해 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성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4인)

강 기 윤 문 정 립 서 용 교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여 상 규 이 강 후
 이 철 우 이 현 승 이 현 재 최 경 환
 한 기 호 홍 지 만

(민현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4인, 기권 의원 14인임)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재 인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흥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상 기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재연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한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7인)

강기윤	강석훈	김태흠	박성효
서상기	최봉홍	황영철	

○출석 의원(25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이완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염동열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오제세	우상호	유기준	유기홍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유대운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이채익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인영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이종진	이진복	이철우	이한구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임내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욱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성호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청래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정호준	조명철	조정식	조현룡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진영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홍문종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개의 시 재석 의원(180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길정우	김경협	김광립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한표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권

○산회 시 재석 의원(46인)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길정우	김광진	김을동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범계	박병석	박원석
박인숙	배기운	부좌현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심재권
양승조	윤명희	윤호중	이노근
이상규	이언주	이에리사	이원욱
이자스민	이철우	이해찬	전순욱
전정희	정진후	진성준	최민희
추미애	황인자		

○청가 의원(16인)

김진태	남인순	서기호	설훈
오영식	원혜영	유성엽	이병석
이상민	이주영	이학영	이학재
임수경	조경태	최동익	황주홍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정진석
의사국장	장상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지방자치발전특별	원유철	새누리당	2014. 2. 20
지속가능발전특별	한명숙	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별	이한구	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별	김성곤	민주당	2014.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상환·김용호)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재경	새누리당	2014. 2. 26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상환·김용호)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김재경 이진복 안덕수 김종태 이노근 김희선 류지영	새누리당	2014. 2. 19
	윤호중 김성주 김 현 민홍철 박완주	민주당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지방자치발전특별	황영철	새누리당	2014. 2. 20
	이찬열	민주당	
지속가능발전특별	박상은	새누리당	
	김기준	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별	전하진	새누리당	2014. 2. 27
	홍종학	민주당	
통상관계대책특별	김종훈	새누리당	2014. 2. 26
	박민수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상환·김용호)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이진복	새누리당	2014. 2. 26
	윤호중	민주당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이상환 · 김용호)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민홍철	김승남	민주당	2014. 2. 21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대성	새누리당	2014. 2. 21

○의안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전순옥·이원욱·배기운·유대운·최원식·신기남·민홍철·전정희·인재근·김미희 의원 발의)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박주선·안규백·김관영·윤관석·정세균·김성곤·김승남·배기운·강동원·강기정·김광진·이찬열·신기남·정의화·김윤덕·유대운·인재근·문희상·정성호·장하나 의원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박주선·안규백·김관영·윤관석·정세균·김성곤·김승남·배기운·강동원·강기정·김광진·이찬열·신기남·정의화·김윤덕·유대운·인재근·문희상·정성호·장하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박명재·박성호·이완영·이노근·김태원·조정식·이강후·강석훈·황영철·염동열·이한성·윤재옥·강은희·김민기·김세연·심학봉·강기운·김광림·정성호·이만우 의원 발의)

2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신학용·김민기·배기운·김승남·박민수·김광진·안민석·이찬열·이만우·

이에리사·김관영·최원식·황진하 의원 발의)
2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정희수·김상훈·손인춘·송영근·박대동·김종태·유승민·심학봉·이명수·이노근 의원 발의)

2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홍문종) 징계안

(2014. 2. 20. 장하나·김경협·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용익·김현·김현미·남인순·노영민·문병호·민병두·박남춘·박수현·박원석·박홍근·배재정·신경민·심재권·유기홍·유승희·유은혜·윤후덕·은수미·이목희·이인영·임수경·전정희·정진후·진선미·진성준·최민희·최재성·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요구)

2월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안덕수·강석훈·한기호·주영순·최봉홍·박명재·김정록·심윤조·이노근·이주영·이현승·이채익·서용교·이완구·이진복·성완중·김현숙·김광립·이한성·김희국·이현재·주호영·정희수·김성찬·손인춘·이만우·윤영석·함진규·김도읍 의원 발의)

2월 21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0 김관영·김광진·김승남·문화상·박기춘·박수현·박홍근·배재정·신경민·안민석·윤후덕·한정애 의원 발의)

2월 2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4. 2. 20 민병두·장하나·윤관석·서영교·인재근·백재현·정성호·박범계·김재운·변재일·안규백·박남춘·김성곤 의원 발의)

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1 유대운·유기홍·김용익·박수현·배기운·윤후덕·이찬열·김재운·김성곤·서영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4. 2. 21 김광진·배기운·안규백·홍종학·이춘석·김태년·이학영·장하나·신학용·김재운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4. 2. 21 홍익표·김승남·남인순·박수현·박홍근·배재정·전해철·정성호·정진후·진성준 의원 발의)

2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원 조성 결의안

(2014. 2. 21 김현숙·인재근·백재현·박완주·길정우·신경림·이자스민·윤명희·李宰榮·김희정 의원 발의)

2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1 유승희·이상민·이목희·박명재·진선미·배기운·배재정·김광진·인재근·김재운·박남춘 의원 발의)

2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2. 21 김한표·이명수·박인숙·정희수·김정록·김기선·권성동·하태경·김세연·이강후 의원 발의)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1 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1 김한표·이채익·김현숙·박윤옥·홍지만·안종범·김도읍·김기선·서용교·김세연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 2. 21 유승희·이상민·김미희·이목희·진선미·배기운·배재정·장하나·이낙연·김광진·인재근·김재운·박남춘·김성곤·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1 이명수 · 김진표 · 김태원 · 김을동 · 함진규 · 이노근 · 안효대 · 문정림 · 이운룡 · 엄동열 의원 발의)

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2. 21 이명수 · 김동완 · 김을동 · 李宰榮 · 정희수 · 문정림 · 강석호 · 조명철 · 이완구 · 이노근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2. 21 이명수 · 김을동 · 이완구 · 문정림 · 이운룡 · 정희수 · 강기윤 · 함진규 · 김태원 · 김한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 2014. 2. 24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발의)

(2014. 2. 24 이종걸 의원 외 125인 발의)

2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2. 24 정부 제출)

2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4. 2. 24 최동익 · 정성호 · 이원욱 · 정진후 · 진성준 · 김관영 · 인재근 · 김상희 · 안홍준 · 박홍근 · 김성곤 · 한명숙 · 박남춘 · 배기운 · 이낙연 · 김미희 · 김태년 의원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4. 2. 24 전병헌 · 진성준 · 전순옥 · 김윤덕 · 박남춘 · 부좌현 · 배기운 · 박민수 · 김성주 · 백재현 · 이노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4 박남춘 · 김영주 · 유대운 · 문재인 · 윤호중 · 인재근 · 최원식 · 우상호 · 신학용 · 이찬열 · 서영교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4 김윤덕 · 윤관석 · 최규성 · 최민희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2. 24 김윤덕 · 박주선 · 윤관석 · 최규성 · 최민희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4 김윤덕 · 윤관석 · 최규성 · 최민희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2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2. 24 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2. 24 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2. 24 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

(2014. 2. 25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2. 25 황주홍 · 김영록 · 안규백 · 박민수 ·

이학영 · 김경협 · 이종걸 · 김영환 · 유성엽 · 이낙연 · 김성곤 · 이인제 · 이명수 · 경대수 · 윤명희 의원 발의)

2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4. 2. 25 최동익 · 배기운 · 배재정 · 부좌현 · 정성호 · 안철수 · 유은혜 · 김민기 · 이낙연 · 이해찬 · 안민석 · 박남춘 · 김성곤 · 문병호 · 김광진 · 김태년 · 이목희 · 김미희 의원 발의)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2. 25 이명수 · 김동완 · 김을동 · 李宰榮 · 정희수 · 문정림 · 강석호 · 조명철 · 이완구 · 이노근 의원 발의)

2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2. 25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2.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2. 25 이명수 · 김을동 · 이노근 · 이완구 · 강기윤 · 함진규 · 김태원 · 김한표 · 염동열 · 이종진 의원 발의)

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2.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사면·복권 및 갈등해결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2014. 2. 26 김우남 · 부좌현 · 강기정 · 박민수 · 김춘진 · 김상희 · 김광진 · 변재일 · 송호창 · 최규성 · 임내현 · 김재윤 · 원혜영 · 박수현 · 김영주 · 이상직 · 도종환 · 신학용 · 강창일 · 장하나 · 전병헌 · 김태년 · 김경협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원제) 추천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재홍) 추천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삼석) 추천안

(이상 3건 2014. 2. 26 의장 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2. 26 부좌현 · 배기운 · 김상희 · 변재일 · 김재윤 · 박남춘 · 김성곤 · 정진후 · 강창일 · 박완주 · 심재권 · 박기춘 의원 발의)

2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2. 26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2014. 2. 26 김제남 · 정진후 · 심상정 · 박원석 · 강동원 · 전순옥 · 안규백 · 서기호 · 최원식 · 장하나 의원 발의)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2. 26 김태원 · 김재원 · 이명수 · 정갑윤 · 박기춘 · 이만우 · 이윤석 · 이한성 · 강기윤 · 박성호 · 이철우 · 김한표 의원 발의)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2. 26 김영록 · 김승남 · 김영환 · 김윤덕 · 김춘진 · 박주선 · 배기운 · 유성엽 · 이종걸 · 황주홍 의원 발의)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2014. 2. 26 오병윤 · 김미희 · 김재연 · 이해찬 · 김선동 · 이상규 · 박민수 · 최규성 · 박수현 · 윤후덕 · 이석기 의원 발의)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2. 26 국방위원장 제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2. 26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대안)

(2014. 2. 27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7 김광진 · 배기운 · 한명숙 · 강기정 · 김우남 · 이석현 · 백재현 · 박홍근 · 이학영 · 강동원 의원 발의)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7 김광진 · 배기운 · 한명숙 · 강기정 ·

김우남 · 이석현 · 백재현 · 박홍근 · 이학영 ·
강동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

(2013. 8. 12 남인순 · 박완주 · 배재정 · 신경림 ·
유승희 · 최민희 · 전순옥 · 김용익 · 이미경 ·
김경협 · 윤후덕 · 박홍근 · 진선미 · 도종환 ·
이학영 · 인재근 · 이언주 · 은수미 · 김광진 ·
박수현 · 박혜자 · 김기식 · 서영교 · 김성곤 ·
백재현 · 장하나 · 진병헌 · 진정희 의원 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원 조성 결의안

(2014. 2. 21 김현숙 · 인재근 · 백재현 · 박완주 ·
길정우 · 신경림 · 이자스민 · 윤명희 · 李宰榮 ·
김희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서면답변서 제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4. 2. 20 정부 제출)

**대형폐가전, 항만공사 및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4. 2. 24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